

민간공항은 '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.

< 보도 내용 (국민일보, 1.29) >

◆ “北 무인기 용산 침투 1년…공항 14곳 중 12곳 무방비”

- “매년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드론 범죄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정부가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.”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보안 및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‘20년부터 이용객이 많은 인천, 김포, 제주 공항에 우선적으로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, 식별 시스템인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. * 인천(‘20.9월), 제주(‘21.11월), 김포(‘23.12월)
 -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 탐지장비(RF 스캐너), 레이더에 더해 광학,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하여 탐지 식별 능력을 고도화하였습니다.
-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4개 민간공항(울산, 여수, 무안, 양양)은 ‘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, 민군 겸용공항*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, 무인기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입니다.
 - * (8개 공항) 김해, 청주, 대구, 광주, 군산, 포항경주, 원주, 사천
- 한편, 드론 진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상,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및 손실보상 규정을 공항시설법에 신설*하여 적극적으로 불법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
 - * 공항시설법 개정안(제56조~제56조의3)이 '24.1.25.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'24.2월 공포 예정
- 앞으로 국토부는 공항주변 불법드론으로 인한 안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공 항정책관 항공보안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준상 (044-201-4232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윤 (044-201-4238)

